[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된 우원식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입법부 수장에 오르게 되면서 여야 간 협치를 어떻게 이끌지 관심이 쏠린다. 우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원에 대해 진보적이다, 상대적으로 온건하다 등의 평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진보적인 것과 온건하다는 것이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온건하다기보다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 나가는 의장이 돼야 갈등을 줄이고 국회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전날(16일)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확정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22대 국회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만큼 우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은 확실시된다. 22대 국회는 강대강 대치 국면이 예고됐다. 171석을 거느린 민주당은 각종 특별검사법안과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내는 것은 물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상임위원장 독식은 의회 독재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 대립으로 자칫 파행이 반복될 수 있는 국회 운영에서 의장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우 의원은 다수 인터뷰에서 "8석의 정치력"을 강조해왔다. 22대 국회 범야권 의석수는 국민의힘 의석수(108석)를 제외하고 192석이다. 8석의 정치력이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고 개헌까지도 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200석)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여당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뜻이다. 우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며 보여줬던 협상력도 강조했다. 우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부권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거부권일 경우 거부권을 넘어서려면 200석이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8석을 어떻게 채울거냐가 저의 관심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관심이기도 하다. 이걸 넘어서려면 싸움이나 압박으로만 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가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협치의 중요성은 인정하되 신속한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앞서 우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여야 협의를 우선 존중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느 때보다 민심을 기준으로 단호하게 국회 운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임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 올라올 경우 최대한 합의할 것을 촉구하며 중재에 오랜 시간을 들였다. 우 의원은 합의 과정을 무시하지는 않되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는 과감성을 보이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에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 다수였던 만큼 이러한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좌고우면없이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국회의장이 가진 직권상정의 권한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또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 현안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안) 등을 최우선 추진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가맹점주, 플랫폼 입점업체 등의 대화한 권리를 보장하는 이른바 '을 교섭권' 법안들의 통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에 "우 의원은 민주당의 대여 공세에 브레이크를 걸 사람은 아니다"라면서도 "합리적 성향으로 국회법 등 협치 운영의 규칙들을 잘 지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도 이야기하면서 국회를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